

# 의대생 수업 참여율 저조... 유급 사태 현실화 우려

## SOCIETY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 전남대·조선대 의대생 수업 거부 지속... 소수만 복귀 2026년도 의대 정원 확정 맞물려 유급 통보 가능성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섰던 광주 의대생들이 복학했지만,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실상 '수업 거부'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유급 우려가 일고 있다.

학교 측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수업 거부가 계속될 경우 유급 등 징계 조치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는 지난 7일부터 모든 의대 수업을 대면 강

의로 전환했다.

대면 강의 참여율은 과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전체 수강생의 10% 정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저조한 수업 참여로 전남대 의대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 요건인 실습 강의 5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본과 4학년부터 유급 조치를 내릴 지 고민하고 있다.

조선대 의대는 복학생, 신입생들의 수업 참여가 저조해 강의를 온라인 비대면

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소수만 수업에 복귀한 상황이다.

즉, 조선대 의대생들도 대다수 의대생들과 마찬가지로 복귀 후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대는 현재까지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해 당장은 유급을 고려하지 않고 학년 말에 학점·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 방침 등 변수가 많아 유급 통보 시점이 바뀔 수도 있다.

의대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한 학기 수업 일수의 1/4 또는 1/3을 이수하지 않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징계가 내려진다.

일반적으로 유급은 학년 말에 확정되지만, 정부의 2026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정과 맞물려 결정이 빨라질 수도 있다.

실제 고려대, 연세대 등은 최근 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유급 처분을 결정하거나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있다.

때문에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의대 학사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론도 나온다.

유급 조치가 이뤄지면 각 학교에서 2024학번과 2025학번, 2026학번이 한 곳에서 강의를 듣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강신청부터 평가까지 교육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계 교육계의 설명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두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에서는

학년 말이면 유급 통보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고시 응시로 실습수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본과 3·4학년들은 계속 수업 거부를 하면 유급이 불가피하다"며 "유급 사태가 확산한다면 2024~2026학번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과 평가를 함께 받는 일이 발생해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율에 따라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하기로 했다. 더 이상 수업 복귀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대 모집 정원을 2025학년도와 같은 5058명으로 확정할 수도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예보 05:59    🌧️ 날씨 22:23  
☀️ 예보 19:06    🌧️ 날씨 07:19



### “내란 대행 한덕수, 광주 찾을 자격 없다”

#### 시민사회단체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광주를 찾은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문동본부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자가 광주를 찾을 자격이 없다”며 “한덕수가 있어야 할 곳은 광주가 아니라 감옥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를 ‘내란 대행’이라 지칭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의 대행자이며 제2의 내란 수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를 “위헌적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마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안에 꿈쩍도 하지 않는 태도는 국민 무시이자 법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점과 ‘내란특검법’ 및 ‘감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을 언급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한 책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한덕수는 즉각 탄핵돼야 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역대 최악의 무능 정권이다”며 “그 중심에서 내각을 총괄한 한덕수가 민생을 챙기는 듯한 쇼를 벌이는 것은 서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무능하고 불법을 일삼는 자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은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홍민 기자 yhb973@2



광주 서구의회 개원 34주년 15일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서구의회 개원 3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전승일 서구의회장과 김이강 서구청장, 의원 및 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 “조속한 경찰 수사를”

#### 유가족협의회, 전남경찰청 방문 공식 항의서한 전달

12·29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 진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15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에 전달된 항의 서한에는 수사 진행 경과 및 확보된 조사자료에 대한 서면보고 제출, 수사 결과에 따른 법적·행정적 조치 계획 공식 회신, 유가족 대상 정기 면담 및 수사 경과 브리핑 체계 수립, 수사자료 중 가능한 범위 내 정보 공개 및 유가족 질의권 보장 등이 담겼다.

유가족협의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닌, 대한민국

항공안전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중대 사건이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유가족은 점점 깊은 실망과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이뤄지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앞서 경찰은 무안공항,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실 3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 관계 음성파일, 활주로 CCTV 영상과 로컬라이저 건설 도면 등 총 1000여점을 압수했다.

또 제주항공 대표, 임직원, 무안공항 건

설과 개량공사, 조류 예방업무 등과 관련된 국토부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 업체 관계자 등 총 5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고와 로컬라이저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경찰, 국과수,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자문교수단 등에서 기초조사를 마쳤고, 향후 합동 정밀조사를 통해 항공기와 둔덕의 충격량 등 물리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고기 이동 경로, 엔진의 수리 이력 등에 대해 교수, 법 영상전문가 등 자문위원을 통해 분석 중이며 블랙박스 FDR의 분석, 엔진 분해 조사 등에 대해서는 사조위와 협조를 통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 입건 등 사법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부시장·구의원·민원인 때문에...”

#### 북구 30대 공직자, 유서 남기고 사망

〈속보〉 ‘광주 북구 공영주차장서 공무원 급진적 선택’과 관련해 자살 원인이 공직생활의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유서가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본보 4월 14일 5면〉

15일 광주 북부경찰과 북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0분께 북구청사 맞은편 효죽주차장에서 30대 북구청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주차된 차량 안에서 발견된 A씨는 변개탄을 피워 급진적 선택을 하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유서에는 “구의원, 부시장, 민원인 등이 힘들게 한다”, “일이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임동행정보센터에서 근무하다 휴직을 한 뒤 최근 북구청 양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이었다.

직원들은 A씨가 유서를 남기고 급진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A씨가 평소 직원들과 잘 어울렸는데, 이러한 선택을 한 게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합동 조문을 간 북구청 간부공무원들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대행사 유적 발굴조사 신청

○해남 두릅산 대흥사 일원 정비 사업에 따른 유적 발굴조사 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15일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제4차 매장유신분과위원회는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에서 추진하는 대흥사 일원 정비사업에 따른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는 두릅산 대흥사 일원(명승)의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대흥사 만일암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해 유적의 성격 규명 및 정비·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신청서를 접수.

조사 지역은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8-1번지 일원으로 조사면적 700㎡이며, 조사 비용은 2억 4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 안전보습 몬스타수분

**TONYMOLY®**  
street culture

★EWG Green 등급 원료 처방  
★순도 100% 발효농차 사용

THE CHOK CHOK GREEN TEA Watery Cream  
CONTAINS 100% PURE GREEN TEA FERMENT EXTRACT  
Instead of distilled water  
TONYMOLY

토니모리 더촉촉 그린티 수분크림